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2일 오전
11시30분 세종
시에서 열리는
신임 시·도회장
상견례에 참석.

동정



오인철
대한건
설협회
도회장
은 2일

오전 11시 세종시
에서 열리는 대한
건설협회 시·도
회장 회의에 참석
한다.

주요 기반시설별 '건설 후 30년 경과' 비율



20년 경과한 상하수도·송유관·통신구

전체의 90% 이상

정부, 기반시설 관리 투자 확대... 효과 거두려면

“노후 SOC 실태 파악 최우선 단계별 맞춤 지원방안 필요”

정부가 노후 SOC(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려면 실태 조사와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을 포함한 4조 4000억원, 이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하기로 했다.

연 평균 8조원의 예산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중대형 SOC 7종과 상하수도 와 가스·열수송·송유관, 전력·통신구 등 지하시설물 8종에 대한 투자에 쓰일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지난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돼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저수지의 96%가 건설 후 30년이 경과했고 댐(45%), 철도(37%), 항만(23%) 등의 노후화도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상하수도 와 송유관, 통신구 등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 전체의 90%를 넘는다.

하지만, 그간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는 턱없이 부족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중대형 SOC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약 10%에 불과하지만,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성능개선에만 건설비 대비 50%를 투자하고 있다. 정부가 노후 SOC 관리 및 개선을

위해 '국가안전 대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진단 이후 보수·보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최근 열수송관 파열과 통신구 화재, '붉은 수돗물' 사태 등으로 SOC 노후화가 사회적 문제로 번진 가운데 이제라도 노후 SOC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가안전 대진단 결과 보수가 시급한 인프라가 1만 5000개를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의 예산 부족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SOC에 대해 정부가 투자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연도별 단순 투자보다는 노후 SOC에 대한 실태 파악과 단계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단순히 연평균 8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에 직결된 SOC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중으로 대대적인 실태 파악을 진행해야 하며 도출된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노후 SOC 보수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재원 조달방안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현기자 ih@